

[9.26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집담회
발제문]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황정규 |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무처장

들어가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최대 동력은 윤석열 자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다수 민중들은 후보 시기부터 자질 부족을 드러낸 윤석열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중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여 심판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반사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0.73%라는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에 간신히 당선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민중들은 윤석열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이는 집권 초부터 낮은 지지율로 드러났다.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요구가 민중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윤석열정권은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수구세력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다양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공격으로 인해 5월 1일 건설노조 조합원인 양희동 열사가 분신하는 일이 일어났고, 양희동 열사가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인 5월 2일, 민주노총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퇴진 기조를 결정했다.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5월 10일에는 이런 결정에 따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을 공식 선포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농빈 대중단체들의 제안으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 연대체인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준)’이 6월 27일에 발족하였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퇴진투쟁 결정은 상당히 신속한 것이었고, 민주노총은 이후 퇴진운동본부(준)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의 퇴진투쟁 결정과 그 간의 역할은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한 퇴진투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냉정히 본다면 퇴진투쟁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동력은 사실상 윤석열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추려도 다음과 같다.

- 윤석열정권은 무능 정권이다. 각종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론에 가로막히면 그런 일한 적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 윤석열정권은 자격미달 정권이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

인간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정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는 무도한 정권이다.
- 윤석열정권은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권이다. 이제껏 집권한 자본가 정치세력 중 가장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자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반민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다.
-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를 증폭시켜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이다.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위기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삶을 악화시킬 정책만 펼치고 있다.
- 윤석열정권은 대미,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는 정책이다. 대다수 민중이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고 있는 게 그 대표적 예이다

윤석열은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퇴진 이유를 늘려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올 여름 오송 공평지하차도 참사에서조차 책임회피의 태도를 보였다. 장모가 부동산 투기로 구속된 상황에서 양평 고속도로 처가 특혜 문제가 불거졌다. 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일어났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에서는 수사외압을 한 것이 드러났으며, 육사 안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다가 들통나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은 어떤 사고를 치면 다른 사고를 쳐서 이전 사고를 덮는 지경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윤석열 자체가 계속 사고를 치면서 스스로 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지 민중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현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지속될 수 있는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권을 실제로 퇴진시키려면 무수한 대중이 거리에 나와 압도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2016-2017년 박근혜 퇴진투쟁을 상기해보면, 연인원 1천7백만에 달하는 민중들이 광화문에 나와 수개월을 완강히 투쟁한 결과 탄핵이라는 형식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윤석열은 박근혜에 비해 더 상식에서 어긋나 있고 철면피적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퇴진투쟁 때에 비해 수구세력이 더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박근혜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진투쟁은 이런 단계에 있지 못하고 있다. 퇴진투쟁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은 윤석열정권이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퇴진투쟁 조건을 진보세력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진보세력의 주체적 조건은 좋지 않고 퇴진투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못하다. 퇴진운동본부(준) 결성 이후 직접 경험한 바 퇴진투쟁의 기조나 투쟁방향 역시 분명히 서지 못하였다. 퇴진투쟁이 민주노총 투쟁사업에 얹어진 정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과 대중단체를 제외하고는 참가 단체들 상당수가 무기력하고 자체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을 실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세력의 주체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퇴진투쟁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으나 민중은 단순히 윤석열이 잘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지는 않는다는 게 이미 확인되었다.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투쟁의 기조를 분명히 세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 퇴진투쟁이 민중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때 민중은 퇴진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① 반자본주의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민중들이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이다. 2016-2017년 촛불 투쟁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촛불투쟁의 성과에 기대어 집권한 문재인정권은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 결국 심판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 말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다름아닌 일자리, 주거문제와 같은 민생문제였다.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도 민생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중의 삶이 악화되는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착취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년 간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민중의 삶은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2020년 발발한 세계대공황은 민중의 삶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2019년 경기둔화 양상을 보인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2020년 3월 무렵 세계대공황이 발생했다. 이 공황과 비슷한 시기 발생한 코로나19 유행은 공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미국을 위시한 각국 자본가 정부는 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여 대공황의 전개를 간신히 지연시켰다. 이런 정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자본가들의 부를 더욱 늘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완화되면서 세계대공황의 양상은 더 이상 지연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지연됐던 세계대공황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역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 악화는 민중의 삶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 이유는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야기한 자본주의체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자본가계급이 이해를 대변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문재인정권이 그랬고, 수구세력 윤석열정권은 더더욱 문제해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정권은 노골적인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의 삶은 계속 악화되고 민중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윤석열 정권이 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친자본 반노동, 반민중 정책으로 일관하는 지를 자본주의 문제와 연관지어 민중들에게 설명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퇴진투쟁이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과거에 비해 한 걸음 나아가 불평등 체제 문제를 제기하고 체제전환을 말하고 있다. 오늘 퇴진운동본부(준) 집담회에서도 대안적 체제 구축 방안이 토론 주제 중 하나로 잡혔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고 이것을 바꾸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현실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체제를 문제 삼고 막연하게 체제전환을 말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으로는 힘있게 투쟁하기 어렵다. 당장은 자본주의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를 문제 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민중들은 단순히 윤석열의 잘못만이 아니라 촛불투쟁과 문재인정권 시절의 경험을 통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보고 있다. 민중들은 2016-2017년 완강한 촛불투쟁을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민중들은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박근혜정권 시절 쌓인 적폐 청산,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랐다. 그러나 촛불투쟁의 성과에 기대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촛불투쟁 과정에서 표출된 민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다. 지면 관계상 이를 매우 축약해서 요약하면, 적폐청산에서 문재인정권은 검찰을 동원한 제한된 적폐청산에 머물렀다. 또한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다. 주거문제, 일자리문제가 그 대표적 예다. 조국사태를 통해 문재인정권은 기득권 자본가 정치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민중들은 두 번의 선거에서 압승을 몰아주면서까지 문재인정권에 대해 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재인정권이 기대를 저버리자 민주당에 대해 심판을 하였고 그 반사이익으로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민중들에게 행동의 효능감이 떨어져 있다. 민중들은 촛불투쟁 때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퇴진투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이 자신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또 다른 자본가 정치세력인 민주당만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죽 썰서 개줬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민중들이 이렇게 경험을 통해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민중들은 윤석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퇴진투쟁에는 적극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대 대선은 국민의 힘 윤석열과 민주당 이재명 간에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대선이었다. 각 후보들은 모두 서로에게 네거티브 공세에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하자투성이의 후보들이었고, 서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면서도 주요 공약에서 서로 수렴하여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민중들은 이런 최악의 네거티브 공방을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대선에서 벌어진 네거티브 공방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들은 이것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 민중들은 윤석열정권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정권 지지도가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 무당파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서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인 민주당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고, 윤석열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 다행히 퇴진운동본부(준)에서 초기 친민주당 분위기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반윤석열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주당 추종 경향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2024년 총선 무렵이 되면 다시 민주당과의 반윤 연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주장이 퇴진운동본부(준)과 그 주변에서 힘을 얻는다면, 진보세력은 민주당 이중대라는 대중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퇴진투쟁이 강화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퇴진운동본부(준)은 이런 점을 내다보면서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2. 윤석열정권에 대한 결정타는 경제파탄, 민생파탄에서 나올 것이다.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화하며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현재 윤석열은 스스로 퇴진 이유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팔라지는 경제악화, 민생악화는 윤석열정권에 결정타가 될 것이다.

세계대공황의 양상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한국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민생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8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4% 감소하여,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한동안 적자가 지속되다가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결과다.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로 1년 전보다 9.6% 감소하였고,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고,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3.5%로, 1년 전의 7.1%의 절반으로 추락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민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의 해결은 차치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정권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재정확대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와 '건전재정'을 펼치고 있다. 부자감세의 경우 집권 이후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양도세, 증여세 납세 기준을 완화했고, 결혼한 자녀에 대한 증여에 대해 최대 3억까지 면제를 해주고 1가구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18억 원까지 증부세를 면제해주는 노골적인 친부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이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월 18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천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세부적으로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 소득세는 17조7천억 원, 상속증여세는 3조3천억 원, 증부세는 1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텅달아 어려워지고 있다. 가뜰이나 경제사정 악화로 지방세 수입이 줄었는데, 중앙정부 교부금마저 급감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각종 중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미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이제는 실업급여 예산과 R&D 예산 등 복지 뿐 아니라 각종 중요 예산도 모두 삭감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

표한 올해 2분기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부 지출(소비+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3%포인트에 이어 2분기 -0.5%포인트로 더 떨어졌다. 이것은 모두 윤석열정권이 경제악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시키는 국가의 주요 기능을 방기하고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민생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은 물가인상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미국과 각국 정부가 대공황의 전개를 지연하기 위해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 결과는 재작년부터 전세계적인 물가폭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물가폭등으로 민생고가 심해졌다. 윤석열정권은 이런 물가폭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물가인상으로 줄어든 소득 걱정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니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하였다. 또한 공공요금은 정부의 중요한 물가 관리 수단인데, 윤석열정권은 거꾸로 공공요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정책을 펼쳐 물가폭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다섯 번에 걸쳐 총 39.6%가 인상됐다. 가스요금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전국적으로 30% 가량 인상됐다. 수도요금 역시 올해에 대략 20% 가량 인상됐다. 이로 인해 민중들은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고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뿐 아니라 공공교통요금 인상도 추진하여, 지난 8월 12일에는 서울시 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나 올랐고, 10월 7일에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물가인상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일시 동결시키는 것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1,000억 원 증액이 전부였다.

요컨대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정권은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민생을 파탄시켜 민중의 분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퇴진투쟁에서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싸워야 한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준)은 그간 활동에서 민생파탄 문제를 전면에 내거는 데 실패했다. 민중들이 윤석열에 대해 분노하고 투쟁에 나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 명약관화한데, 그 동안 활동에서 민생문제가 부각되지 못했다. 가령 퇴진운동본부(준)이 발족하기 전에 열린 첫 번째 집행책임자 회의에 제출된 사업계획에는 구체적 투쟁 사안으로 핵오염수 문제 밖에는 없었다. 그 후에도 민생문제는 주변적으로 배치되거나 주로 자영업자 문제로 집중되고 일종의 피해 사례와 같이 배치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활동에서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공공요금인상 반대!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퇴진! 선전전”이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 것 외에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향후 민생파탄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걸고 퇴진투쟁을 전개해가야 한다.

3. 지금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며 내년 총선 이후 전개될 본격적 퇴진투쟁을 준비해가야 한다.

윤석열 스스로가 퇴진의 이유를 쌓아가고 있지만, 윤석열을 결정적으로 몰아낼 진보세력의 주체적 역량은 아직 부족하다.

우선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현재 조건에서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7월 1차 범국민대회 이후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집회 동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범국민대회의 주된 역량은 민주노총에서 나오고 있고 이는 민주노총이 퇴진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퇴진투쟁은 민주노총의 기존 투쟁에 얹혀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을 진짜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 무수한 대중들이 참여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퇴진투쟁의 기초와 내용을 분명히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서 있다고 할 수 없다.

진보세력 상당수가 활력이 없는 실정이다.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한 단체들은 많지만 퇴진운동과 관련된 자체적인 실천활동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무국에 활동가를 파견한 곳도 일부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이런 주체적 요인에 더해 앞서 설명했듯이 민중들도 과거 경험을 통해 퇴진투쟁에 적극 나서려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고, 게다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총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도 존재한다.

따라서 당장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경과하면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자체가 위기를 자초할 것이고, 경제와 민생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이런 윤석열이 대통령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 민중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세력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지금의 시간을 부족한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적 퇴진투쟁을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투쟁역량을 가지고 총선 이후 윤석열정권과 운명을 건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대중적 퇴진투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 퇴진운동 연대체와의 관계, 특히 자유주의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 등과의 관계를 정립해가야 한다. 퇴진운동본부(준) 결성 단계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진보세력의 퇴진운동 연대체가 자유주의 성향의 퇴진운동 세력과 뒤섞이고 그로써 사실상 민주당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민중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인식되는 위험이 있었다. 퇴진운동본부(준)은 현재 진보세력의 퇴진운동 연대체로서 스스로를 강화시켜가야 한다. 아직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하지 않는 진보단체들과 이른바 진보정당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퇴진운동본부(준)의 외연을 확대하고, 대중적 퇴진운동의 중심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힘을 가지고 타 퇴진운동 연대체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퇴진운동본부(준)만으로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결정타를 먹일 수 없고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대중단체를 넘어 수많은 민중들이 퇴진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는 단계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싸우는 다른 연대체들과 공동 투쟁을 모색하는 게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유주

의세력이 아닌 진보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투쟁을 이끌 수 있게 자체 투쟁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공동 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4. 퇴진투쟁을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퇴진투쟁은 고도의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이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아쉽게도 아직 퇴진운동본부(준)에 있는 노농빈 단체들에 서조차 소속 조합원, 회원들 속에서 퇴진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배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퇴진운동본부(준)의 주축인데, 그 역량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인 퇴진투쟁 활동을 벌이는 경우를 접하였으나, 아직도 현안 문제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만 덧붙여진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120만 조합원들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공감하여 적극 나선다면 막강한 힘이 발휘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퇴진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합원 교육, 선전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퇴진운동본부(준)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배치해야 한다.

5.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해야 한다.

① 퇴진투쟁의 전선 확대와 관련하여

퇴진투쟁의 전선 확대에서 최우선 과제는 퇴진운동본부(준)의 외연을 확대하여 본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퇴진운동본부(준)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진보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의 참여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퇴진투쟁은 고도의 정치투쟁으로, 진보정당이 이런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스스로 진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퇴진운동본부(준)에는 이른바 민주노총이 인정하는 진보정당들이 한 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정의당은 퇴진 결의를 한 적이 없고 진보당 역시 퇴진 결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노동당은 퇴진 결의를 하였으나 다른 진보정당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노동당만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당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퇴진운동본부(준)에 참여시키도록 압박하는 것이 퇴진투쟁의 전선 확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② 대중투쟁 형성과 관련하여

대중투쟁 형성과 관련하여 지금의 활동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야 한다.

우선, 퇴진운동본부(준)이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간 활동에서 사업 대부분이 기존 민주노총의 사업에 퇴진투쟁을 덧씌운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노총의 중심적 역할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퇴진투쟁의 활력이 생기기

어렵다. 실제로 범국민대회 외에 사실상 퇴진투쟁에 걸맞은 사업이 거의 없고 범국민대회 동력도 줄어드는 양상이다. 퇴진투쟁 의제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거의 전적으로 핵오염수 방류 반대에 머물고 있고 그 동력조차 급속히 사그라지고 있다. 이 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민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쟁동력을 확장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합원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되고 집행부가 주로 발언하는 민주노총의 기존 집회 형식이 반복되고 있어 퇴진투쟁의 활력이 생기기 어렵다. 과거 광우병 쇠고기 투쟁이나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을 되돌아보면 참여자들의 자유발언을 고무하였고 다양한 집회 형식이 나왔다. 판에 박힌 집회 형식을 탈피해 일반 민중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투쟁 의제에서도 헌법유린, 반민주, 굴욕적 외교 등 자유주의세력과 소부르주아민주주의세력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핵오염수 방류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민생파탄 문제와 같이 민중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퇴진투쟁의 의제를 민중들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장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사업이 입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퇴진운동본부(준)의 사업은 단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퇴진운동본부(준)에 서른 개 이상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수 민주노총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단체들은 집회나 기자회견, 회의 정도 참여하는 것 말고는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이미 많이 겪어온 여타 연대체와 비슷하게 활력 없이 운영되고 있고, 그와 연동해 민주노총 등 실제 사업을 책임지는 단위의 업무 하중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참여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고무되기 보다는 부담스럽게 인식되는 듯하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탈피해 일상 시기에 선전전, 소규모 집회, 교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고, 참여단체들이 여기에 적극 결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투쟁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제대로 된 정치총파업을 준비, 전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현안을 묶고 시기를 일치시켜 진행하는 총파업은 총파업이라고 할 수 없다. 올해에는 각 산별노조들이 위기감을 갖고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이 정도의 총파업 아닌 총파업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 수 없다. 프랑스처럼 백만 총파업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더라도 최소한 120만 조합원 중 수십만 명은 참여하고 다른 계급·계층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강력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총파업 투쟁은 지도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스스로 투쟁의 의의를 인식하면서 행동에 나서는 것을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태세를 갖추고 윤석열정권 퇴진 정치총파업을 목표로 조합원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육,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마치며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퇴진운동본부(준)이 결성된 후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조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는 퇴진운동본부(준)이 발족하는 단계부터 퇴진 투쟁의 기조로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하고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해왔고, 퇴진투쟁에서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선전전을 제안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퇴진운동본부(준) 발족 이후 활동 속에서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런 문제의식을 오늘 집담회의 발제문에 담고자 하였다.

발제문은 진보세력 중심의 퇴진투쟁이 본격화되었으나 아직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에는 주체적 부족함이 있고 퇴진투쟁의 동력을 윤석열 자신이 만들고 있어 투쟁이 지속되는 형국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퇴진투쟁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발제문은 우선 반자본주의, 반민주당 기조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경제상황과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민생문제가 윤석열정권의 결정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퇴진투쟁에서 민생문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퇴진 투쟁의 조건 상 곧장 윤석열을 퇴진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며 내년 총선 이후 전개될 본격적 퇴진투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진투쟁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배치해야 하고, 퇴진운동본부(준) 지금 활동과 달리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담회에서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